

환경관련업소 지도단속 등 환경분야 기획감사 결과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젊은 도시, 인천

|| 목 차 ||

1. 감사목적	1
2. 감사결과	1
3. 주요 지적사항	2
4. 기타 특이사항	8
1. 제도개선(필요)	9
2. 우수사례(수범사례)	13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람표	20

1. 감 사 목 적

-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관리를 함에 있어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다른 측정항목에 비해 투명성, 책임성지수가 낮게 측정된 사항에 대하여 원인파악
- 환경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기 위함.

《 감사개요 》

- ▷ 감사기간 : 2010. 3. 25. ~ 4. 14. (13일간)
 - 시본청 : 2010. 3. 25 ~ 4. 2 (7일간)
 - 남 구 : 2010. 4. 12 ~ 4. 14 (3일간)
 - 남동구 : 2010. 4. 5 ~ 4. 7 (3일간)
- ▷ 감사범위 : 2008.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배출업소 관리(환경관련 업소 지도단속 분야) 등 업무전반
- ▷ 감 사 반 : 전략감사팀장 외 3명

2. 감 사 결 과

기 관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환급)	제도개선	우수사례	비고
	계	주의	시정	개선				
계	17	5	7	5	1/600천원	3	6	
시 본청	7	2	1	4			3	
남 구	4	1	3		1/600천원	3	1	
남동구	5	2	2	1			2	
군단 공통	1		1					

3. 주요 지적사항

《 “개선” 처분 사례 》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추진 소홀 (본청)

- ❖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신고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2007.12.17)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사안에 따라 정액과 정율(과태료 부과 금액의 10%)로 각각 운영되어야 하나, 정액(3만원~3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환경부 “환경 오염행위신고 포상금 운영지침”과 다르게 운영.

⇒ 환경부 지침을 준용한 조례 개정

② 남동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규제 불합리 (본청)

- ❖ 남동국가산업단지내 악취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의 유입을 제한 하여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남동산업단지 환경 오염 배출업소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세부지침」을 마련(2008.7.15) 제한하고 있으며, 1종부터 4종사업장은 20%범위 내에서만 증설이 가능하여 종별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반면 5종사업장(폐수배출 50m³/일 미만)의 경우에는 증설에 제한 없이 가능 토록하여 형평에 맞지 않게 운영.

⇒ 1종 내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간에 형평에 맞지 않는 「남동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 세부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정” 처분 사례 》

① 오수·분뇨 등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 소홀 (남구, 남동구)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9.27 폐지되면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수수료 징수 규정, 과태료 징수규정 등을 정비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남동구는 동 조례에 의거 분뇨 등의 수집·운반 수수료(요금)를 정액이 아닌 “10ℓ 당 200원 이하” 등으로 명확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

⇒ 불명확한 분뇨 등의 수집·운반 수수료 규정 및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 (남구)

- ❖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동 ○-○번지 (주)○○종합건설에 대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및 특정공사변경 (방진벽의 종류중 흡음형 방진벽을 EGI(Electro Galvanized Iron)철판으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하여 각각 행정처분을(경고 및 과태료) 하였으나, 방진벽의 종류(재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부적정하게 행정처분을(경고 및 과태료 600천원) 하였음.

⇒ 부적정하게 부과·징수된 과태료는 환급처리하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철저

③ 자율점검업소 지정 · 관리 소홀

㉠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지정 활성화 소홀 (본청, 남구, 남동구)

- ❖ 대기, 폐수, 소음 · 진동배출시설 등의 설치 사업자는 스스로 환경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기관의 간섭을 축소하고 행정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2004. 9. 1부터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정율이 낮고 활성화 노력에 소홀히 함.

※ 2009년도 자율점검업소 지정율

- 본청 지정율 5%, - 남구 3%, - 남동구 0%

⇒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의 취지를 잘살려 심사기준에 적합한 다수의 배출업소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자율점검업소 지정 부적정 (본청)

- ❖ 자율점검업소 지정은 청색등급(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업소 중 지정 요건에 적합 할 경우 지정하며, 대기, 폐수 배출시설 외의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 다른 분야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색등급이 아닌데도 부적정하게 지정(3개소)하였으며, 또한 대기, 폐수 외의 분야도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였어야 하나 폐기물분야는 제외하고 지정(9개소)함.

⇒ 자율점검업소가 부적정하게 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또한 사업장 단위로 지정되지 않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 후 적법하게 처리

④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산출처리 부적정 (남구)

❖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또는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 방법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 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남구 ○○동 ○-○번지 ○○○○외 1개 사업장의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보험을 갱신하면서 5,697천원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 보증보험금을 적게 가입.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보험 가입금액을 적게 가입한 업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가입토록 시정

⑤ 폐기물재활용신고에 따른 보관시설 설치 부적정 (남동구)

❖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남동구 소재 (주)○○○○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에 대하여 1일 처리능력(900톤)이 아닌 반입량(210톤/일)을 적용하여 보관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토록 함.

⇒ 폐기물재활용신고 업소의 보관시설은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시정조치

⑥ 분노 및 개인하수시설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소홀

㉠ 수집·운반된 분노의 적정처리여부 점검 소홀

(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 2009. 6월부터 분노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분노를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반입(강화군 제외)하여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분노수집·운반업자의 분노수집·운반실적과 가좌하수처리장에 반입된 분노량을 대조해 본 결과, 남동구의 경우 분노수집·운반업자가 보고한 수집량은 약 94,726톤인 반면, 가좌하수처리장의 반입량은 약 81,815톤으로 12,911톤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6개 구의 분노수집·운반업의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임.

⇒ 보고된 분노수집·운반량과 가좌하수처리장 반입된 량에 차이가 있는 분노수집 운반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에 대한 기술인력 상근여부 점검 소홀 (남구)

- ❖ 남구 소재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된 (주)○○○○○환경의 기술인력 6명 중 2명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뿐 나머지 4명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기술 인력을 미달되게 운영

⇒ 앞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시 등록된 기술인력과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기술인력 상근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인력이 미달된 업소 적법 조치

《 “주의” 처분 사례 》

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본청)

- ❖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차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처분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하나, 남구 ○○동 ○-○번지 (주)○○○에 대하여는 부적정하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로 고발하였다가 재차 변경하여 폐수배출시설 변경미신고로 위반확인서 징구 없이 행정 처분(경고) 및 과태료(60만원)를 부과함.

⇒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시에는 관계 법령 연찬 등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② 대기기본부과금 부과 산정 부적정 (본청, 남동구)

-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하여 년2회 기본부과금을 부과되 확정배출량 신고시 자가측정에 의한 일일 유량 산정은 측정농도에 시간당 측정유량과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의 평균치를 곱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6개월 평균조업시간으로 부적정하게 산정됨과.

⇒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및 산정 후 기본부과금을 부과

4. 기타 특이사항

1. 제도개선(필요)

- ☐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완화(남구) 11
- ☐ 환경기술인 교육 개정(남구) 13
- ☐ 허가취소(직권말소) 관련 개정(남구) 14

2. 우수사례(특수시책)

- ☐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경미한 사항 현장(즉시) 시정(시 본청) · 15
- ☐ 체계적인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시 본청) 16
- ☐ 민원상담관계 운영(시 본청) 17
- ☐ 탄소발자국 SMS문자서비스 운영(남구) 18
- ☐ 비산먼지 환경관리시스템(CCTV)체계 구축(남동구) 19
- ☐ 1사1도로 「클린관리제」 확대 운영(남동구) 20

제도개선(필요)

□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완화 (남구)

● 현 황

- 점검기관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 : [붙임]
- 사용중지, 허가취소,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은 1개월 간격으로 확인
- 행정처분 기간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환경에 심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는 확인횟수를 늘려야 함
-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함
 - 고발, 행정처분

● 문제점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으나 건축법 등 타법 저촉사항으로 인하여 설치허가가 불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월1회 확인하여 재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따름
- 행정처분 기간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확인횟수를 줄여야 함

● 개선방안

- 행정처분기간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환경에 심대한 위해가 초래하지 않는 경우 확인횟수를 월1회에서 연1회로 완화 조치

[붙임]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제16조 제3항 관련)

행 정 처 분 사 항		확 인 시 기		확인횟수 (확인주기)
처분명	처분기간	최초확인	최종확인	
조업 또는 영업정지	개월 미만	처분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처분종료일	2회 이상
	1개월~6개월 미만	위와 같음	처분종료일 이전 3일 이내	3회 이상
	6개월 이상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회 이상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위와 같음	행정명령이행 완료시 까지	(처분개시일로부터 1개월 간격)

- 비고 : 1) 행정처분기간 중 불법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환경에 심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는 확인횟수(확인주기)를 늘려야 한다.
- 2)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인 교육 개선 (남구)

●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교육기관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시·도지회)
 - 교육기간 : 대기(1일, 2일, 4일과정), 수질(1일, 2일, 4일과정)
소음·진동(1일과정), 유독물(1일과정)
- ※ 대기일반관리자과정(1일) : 5종 사업장(방지시설 면제사업장 등)
대기일반관리자과정(2일) : 4~5종 사업장, 단순도금시설, 아파트 등
대기전문관리자과정(4일) : 1~3종 사업장,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
- ※ 수질일반관리자과정(1일) : 운수세차, 위탁폐수,
수질일반관리자과정(2일) : 4~5종 자가처리사업장
수질전문관리자과정(4일) : 1~3종 사업장,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교육횟수 : 대기[신규교육(1년이내), 보수교육(3년마다)]
유독물[최초교육(1년이내), 계속교육(3년마다)]
수질[3년마다], 소음·진동[3년마다]

● 문제점

- 소수의 직원들이 있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교육을 수료하고자 교육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례 및 미수료자가 발생되고 있음
- 대기 및 유독물 환경기술인의 경우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 1회 교육 실시하고 있으나, 수질 및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최초교육에 대한 법정 단서조항 없어 선발과정시 혼란 및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개선방안

- 교육대상자의 편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사이버 교육 추진 (수료 기준 : 강의이수 및 평가제 도입)
- 교육횟수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규제법 신규교육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 허가취소(직권말소) 관련 개선 (남구)

● 현 황

- 환경오염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진동, 기타수질) 폐업시 시군구에 변경(폐쇄)신고 및 신고증명서 반납,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3호 :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4호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한 경우
 -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 제3호 :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문제점

- 민원인들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는 것으로 모든 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인지하여 구청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구청에서는 면허세를 계속 부과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 개선방안

- 폐업신고시 관할세무서에서 시군구에 폐업사실 의무 통보토록 조치
- 임의로 폐업한 사업자는 실제조사 등을 통해 신고증명서를 반납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신설
- 직권말소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규정 신설
 - 예)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취소(직권말소)할 수 있는 관련조항 신설(시설폐쇄 된 경우 등)

우수사례(특수시책)

□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경미한 사항 현장(즉시) 시정 (보청)

- 취지 : 사업장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가급적 행정지도 요망 여론 형성
- 기존 : 법령 위반사항 적극 적발
- 변경 :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외의 사안(관리행정)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와 즉시 현장시정 토록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강화

● 기대효과

- 위반율 감소 : 3.6% → 2.9%
- “경고” 등 경미한 처분사항에 해당되는 위반사례 약 50% 감소
- 조업정지, 고발 등 중요 위반사항은 점검을 대비 증가추세 임

[점검실적 비교]

구분	점검대상 업소수	점검업소수 (점검율%)	위반업소수 (위반율%)	위반내역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기타
2008년	2,782	3,996 (143.6%)	143 (3.6%)	67	20	12	44
2009년	2,902	3,440 (118.5%)	100 (2.9%)	53	19	6	22
비교증감	+120	-556	-43	-14	-1	-6	-22

[처분실적 비교]

구분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기타	고발
2008년	65	20	14	43	-	28
2009년	50	20	4	22	2	28
비교증감	-15	0	-10	-21	2	0

□ 체계적인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보청)

● 취지

- 관리대상 사업장수가 3,220개소(인허가 사업장)로써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장별 잦은 출입현상 초래 및 행정력 누수 발생
- 기존 환경행정 정보시스템으로는 통합관리가 불가하여 자체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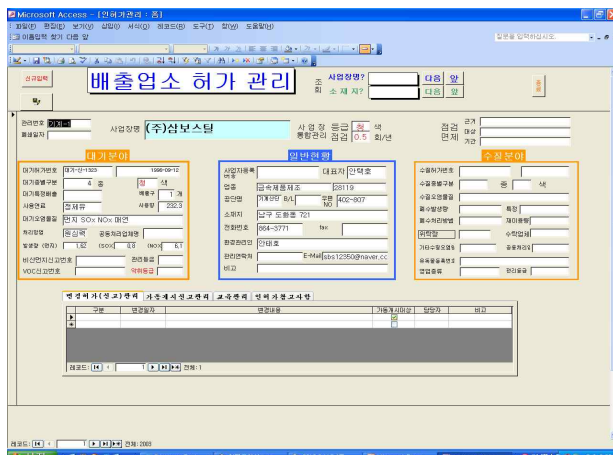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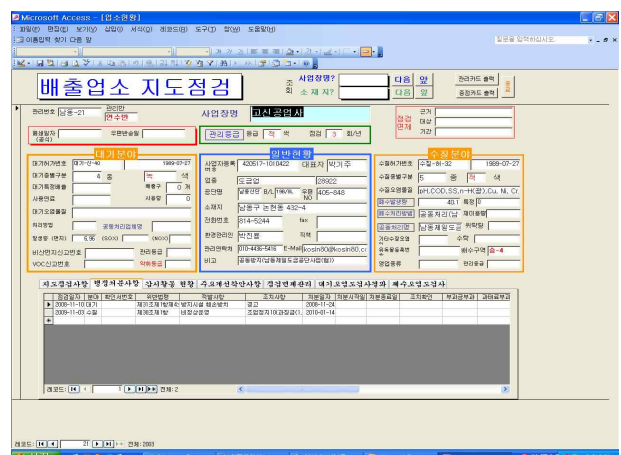
● 기존 : 엑셀테이터를 구성하여 관리하였으나 통합관리 불가하여 인위적 관리체계 운영

● 변경 : 각 사업장별로 세부 인허가 사항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 개요 : 인허가 변경사항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을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 개발방식 : 비예산 자체개발
- 개발자 : 지도·점검 담당직원
- 사용기간 : 2009년~현재
- 특이사항 :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수시 변경하여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

● 기대효과

- 각종 업무관리용 대장이 실시간 전산입력되고 있으며 자료관리행정이 간소화 되고 통합 조회가 가능하여 사업장별 관리가 용이해짐
 - 간소화 업무 : 허가대장, 지도·점검대장, 행정처분대장, 오염도 검사대장, 대기기본부과금부과자료 산정 등
- 개인별 30분/일 이상 관련업무 소요시간 절약 및 자료의 정확성 유지
[절감시간 : 30분/일 × 6인 = 300분/일]

□ 민원 상담관제 운영 (본청)

● 취지

사업장에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상담 요구 시 행정처분 실무자는 업무의 편리성 위주로 응대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어 민원인과의 마찰 발생이 우려되어 상담관을 별도 지정 운영

● 개요

- 상담관 : ○○팀장
- 운영방식 : 불이익 처분 행정절차 진행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별도로 상담관을 지정 통보하여 사업장 애로사항 등을 수시 상담토록 유도.
- 운영실적 : 47건(2009년도)

● 효과

- 담당자와의 불필요한 마찰발생으로 오해발생 및 음해성 여론 형성 등 차단
- 피 처분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처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으로 규제행정의 유연함 확보기회

□ 탄소발자국 SMS 문자서비스 운영 (남구)

● 목 표

-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통장 갖기」 가입 세대의 전기, 수도, 가스 감축량을 CO₂ 양으로 환산하여 문자발송 서비스 시행

● 사업개요(현황)

- 녹색통장 가입 목표

년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입세대	400	5,000	7,000	10,000	19,000	22,000	30,000

※ 2009년 1,900세대 가입

- 감축량에 대한 직접적으로 인센티브 포인트를 안내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 극대화

● 추진계획

- 녹색통장 가입세대의 전월 전기·수도·도시가스 확인량(사용량) 확인
- 감축량을 확인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및 인센티브 포인트로 환산
- SMS 문자로 각 세대의 사용량, 감축량, 포인트 환산점수 발송

※ 탄소 배출량 환산 계수

구분	전기	수도	가스
배출계수	1kwh = 424gCO ₂	1㎥ = 332g CO ₂	1㎥ = 2,780gCO ₂

※ 포인트 : 10gCO₂ = 1point = 3원

● 소요예산 : 비예산

□ 비산먼지 환경관리시스템(CCTV)체계 구축 (남동구)

◆ 레미콘제조업체 및 모래채취업체 등 비산먼지 취약업체에 대하여 자동환경관리시스템(CCTV)을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비산먼지 취약사업장과 구청간 실시간 환경감시체계 구축
- 기업체의 내부 감시기능이 아닌 상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 2009년 추진실적

- CCTV 설치 사업장 : 5개업소
 - 레미콘회사(4) : ○○기업(주)송도, (주)○○레미콘, (주)○○공장
송도공장, (주)○○○인천공장
 - 모래채취회사(1) : ○○산업(주)

● 2010년 추진계획

- 자동환경관리시스템 (CCTV)구축 확대
- 생활환경 『기동순찰반』 설치 운영 : 2010. 2월경



« 구청 환경과 상황실 화면표출 장면 »



« 사업장 CCTV 설치 장면 »

□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확대 운영 (남동구)

- ◆ 실질적인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민·관의 공동 노력으로 대기질 체감환경을 개선하고
- ◆ 도로 재비산먼지 취약지 환경관리에 주변 사업장의 참여 확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목적 : 대형공사장 주변 사업장의 참여 확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사업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사업기간 지속시 자동 연장)
- 시행방법 : 사업장 자율 참여 방식에 의한 『1사 1도로』 관리
- 사업내용 : 책임 관리구역 지정도로에 대하여 청소 장비로 주기적 운행

● 1사 1도로 추진현황

구 역	참 여 회 사	장비내역	운 행 구 간	길이 (km)	비고
3개구역	13개사	진공차 4대 살수차 11대	8개구간	44.7 (km, 왕복)	
고잔·송도 해안지구 (4개사)	○○기업(주)	진공(15톤) 1대	고 잔 길	3.7	
	(주)○○건설, ○○건설(주), ○○건설산업(주)	살수(11톤) 3대	송도해안도로 (운전면허시험장 ~LNG기지 입구)	7.9	
논현·소래 지구 (6개사)	(주)○○건설	진공(8톤) 1대 살수(12톤) 2대	논고개길(3-21대로)	5.0	
	○○물산(주)건설부문	살수(16톤) 1대	은봉로(3-23대로)	3.5	
	(주)○○건설, ○○건설(주)	살수(5톤) 1대	소 래 안 길	6.0	
	○○건설(주)	진공(10톤) 1대 살수(16톤) 1대	소 래 길 (주적골삼거리~상인 천중학교)	11.5	
	(주)○○건설	진공(10톤) 1대 살수(16톤) 1대	소 래 길 (주적골삼거리~소래)	4.6	
항촌지구 (3개사)	○○기업(주), (주)○○건설, ○○건설산업	살수(10톤) 2대	백 범 로	2.5	

● 2010년 추진계획

○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확대 추진

- 신규 대형공사장 및 취약지역 발생시 추가 확대 지정

○ 간담회 실시(반기1회)

- 사업장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

○ 지정도로에 대한 관리현황 파악

- 월1회 이상 현장 순찰점검 실시
- 사업장에서 책임관리구역 청소일지 작성 월1회 이상 제출

○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연말 우수사업장 포창상신



« 고잔충도구역 진공청소차 청소 장면 »



« 향촌구역 살수차 도로 물청소 장면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람표

연번	감사기간	제목 및 처분요약	조치구분 (행정상)	기관(부서)	붙임 (쪽)
1	2010.3.25 ~4.2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추진 소홀 ⇒환경부 지침을 준용 조례 개정	개선	시 본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1
2	"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소홀 ⇒부적정 지정업소 적법조치	시정□ 주의	시 본청 (대기보전과)	7
3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앞으로 법령 연찬 철저	주의	"	11
4	"	□폐기기본부과금 부과 산정 부적정 ⇒앞으로 제출서류 확인 철저 및 적법 산정부과	주의	"	13
5	"	□남동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규제 불합리 ⇒합리적으로 개정 방안 강구	개선 (권고)	"	15
6	"	□환경기술인 교육업무 미흡 ⇒환경행정정보시스템 등과 연계 방안강구	개선□ 주의	"	17
7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업무 이원화로 기업불편 초래 ⇒인허가권을 일원화 방안 강구	개선 (권고)	시 본청 (대기보전과, 법무담당관), 남동구 (환경과)	23
8	2010.4.5 ~4.7	□요수면노 등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 소홀 ⇒관련 조례 정비	시정	남동구 (환경과)	1
9	"	□폐기물재활용신고에 따른 보관시설 설치 부적정 ⇒처리능력에 맞는 보관시설을 갖추 도록 시정	시정	남동구 (청소과)	4

연번	감사기간	제목 및 처분요약	조치구분 (행정상)	기관(부서)	불임 (쪽)
10	2010.4.5 ~4.7	□자율점검업소 지정 활성화 소홀 ⇒제도 취지를 잘살려 다수의 업체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추진	주의	남동구 (환경과)	6
11	"	□폐기기본부과금 부과 산정 부적정 ⇒앞으로 제출서류 확인 철저 및 적법 산정부과	주의	"	8
12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업무 이원화로 기업불편 초래 ⇒인허가권을 일원화 방안 강구	개선 (권고)	시 본청 (대기보전과, 법무담당관), 남동구 (환경과)	10
13	2010.4.12 ~4.14	□요수면료 등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 소홀 ⇒관련 조례 정비	시정	남 구 (환경보전과)	1
14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 ⇒부적정하게 부과된 과태료는 환급처리하고 앞으로 동일사례가 없도록 연찬 철저	시정	"	2
15	"	□자율점검업소 지정 활성화 소홀 ⇒제도 취지를 잘살려 다수의 업체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추진	주의	"	4
16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산출처리 부적정 ⇒보험 가입금액을 적게 가입한 업체에 대하여 적정시정 조치	시정	남 구 (청소과)	6
17	"	□분뇨 및 개인하수시설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소홀 ⇒분뇨반입량 차이가 있는 업소 지도 점검 후 조치, 기술인력 미달회사 조치	시정□ 주의	군단	1